■광주시장 후보

정용화(45)	강운태(61)	장원섭(44)	윤난실(44)	이병완(55)	정찬용(58)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前 청화대 연설기록 비서관	국회의원	前 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	前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前 청와대 인사수석
동북아 최대 사이언스파크 육성 빛고을 장애인 재단 설립	R&D 특구개발 아시아중심도시 문화산업육성	최저임금 현실화 도시 건설 장애인 '자립생활의 도시'건설	정책실명제 주민참여 예산제도	광주 미소 금융 재단설립 국제상품거래소 광주유치	자동차 메카시티 조성 민주연립 지방정부 구성

이름
정당
경력
공약

■전남지사 후보

김대식(48)	박준영(63)	박웅두(41)	김경재(67)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평화민주당
前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전남도지사	민노당 대표 비서실장	前 15·16대 국회의원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일자리 10만개 창출 관광객 1억명 유치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체불임금 우선 지원조례	8만 전남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세계커뮤니티 '전남방' 설립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별 본선 전략

MB정권 심판론 vs 민주당 견제론

민주 "지역 발전·정권 창출 교두보 만들자"

한나라 득표율 관심속 反민주 연대 움직임도

6·2 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불꽃튀는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과 각 야당 은 '반 MB'를, 민주노동당 등 군소 정당은 호남에서 '반(反) 민주당'을 내세우고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한나라당은 정용화 후보는 지난 15일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뒤 19일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 광주의 젊은 리더'를 자임하고 있는 정 후보는 자유도시·경제도시·교육도시 3대 목표를 내세우고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정 후보는 금호타이어와 남양건설 정상화에 앞장서면서 야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며 20% 이상의 득표율을 위해 뛰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 후보의 '약진'을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는 "광주는 이제 정치도시에서 경제도시로 변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 경력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 정부와 청와대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 기필코 광주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경선 잡음'으로 인해 아직까지 눈에 띄는 행보는 하지 않은 채 국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치열한 경선을 치른 탓인지 '동력'확보를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다져놓은 조직과 지지세력 등을 기반으로 '본선'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광주에서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것 "이라며 "광주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반듯하고, 부러워하며, 여행가고픈,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를 내세우는 득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장 후보는 "민주당 독점 구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인 민노당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진보정치 대표 주자를 자임하며 현장 노동자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진보적 인사와 야성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검증된 정치인을 내세워 반 민주당 연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민참여당 이병완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풍'을 광주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노풍'과 새로운 세력의 연대를 위해 무소속 정찬용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한나라당 김대식, 민주당 박준영, 민주노동당 박웅두,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 등이 차기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지방선거 사상 첫 경선을 통해 선출된 만큼 두 자릿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다. 경선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매일 같이 누비며 지지를 호소해 온 만큼 인지도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일·정훈 후보 2명이 김 후보를 돕기로 해 선거운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선' 경험과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박 후보는 전남이 민주당 텃밭임을 감안해 '압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 관광객 1억 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표밭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현직을 잠시 접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후보는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각 지역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등 완벽한 승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는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농민 후보들과 합심하고 있다. 김경재 후보는 'DJ' 정신을 내세우고 전남에서 평화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전략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권연대 무산…진보진영 비상

후보 단일화 실패…수도권 한나라 유리한 구도

6·2 지방선거 연합공천을 위한 4+4 야권연대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순천과 광주 서구 등 두 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호남 양보안이 폐기됐다. 또 야권 후보 난립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등에서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구도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 한나라당과 일대일 대결구도를 구축,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인 수도권 '빅3'를 탈환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이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 4당과 4개 시민단체는 시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며 20일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경기지사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의 공천권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에 의해 경기지사 경선룰에 관한 합의가 파기됨으로써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우리는 참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여론조사 50% + 도민선거인단 50%' 방식을 수용하면서 동원경선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참여당은 여론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참여당이 갑자기 동원선거의 폐해를 상쇄해야 한다며 선거인단의 상당 부분을 시민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여론조사의 내용으로 선거에서의 단순 경쟁력 방식이 아닌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한 경쟁력이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참여당은 국민참여경선 역시 선거인단 중 20%를 시민사회단체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4+4협의체의 가합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단의 10%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경기도민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한 후보 경쟁력을 묻는 최종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5개월간 지속됐던 야권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최종 결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유증

정치적 타결로 봉합?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확정 문제를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 당원 여론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역 여론조사 방해 시비를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맡기느냐를 놓고 좀처럼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당초 22일 개최할 방침이었던 재심위(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다음 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와 관련,

여론조사 불법 규명 어렵고 시간 촉박

조사 결과 따라서 후보 교체 가능성도

보고서를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재심위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당내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확정 문제는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역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즉, 재심위가 내주 중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심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심위가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장관의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장 후보 경선 파문은 봉합될 전망이다.

재심위가 이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고위에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강운태 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할 수도 있다. 이는 재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의 반발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지만,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무효화하고 다시 경선을 실시하거나 전략공천에 나설 수 있는 내부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시장 후보 교체는 수도권의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 선거 등 6·2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 역-여론조사와 강운태 후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광주시장 후보 교체는 불가피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주류 측이후보 교체를 밀어 붙일 경우 최고위원회의도 막을 만한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후보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 당 안팎의 관측이다.

유선호 민주당 재심위원장은 "재심위는 이의 신청의 수용 여부만 결정하며 정치적 판단은 최고위에서 할 것"며 "재심위는 다음 주 중에 개최될 것이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